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

2020년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는 물론 개별기업까지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2020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속도와 폭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확대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2020년 3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약 547조원의 예산이 지출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558조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건설부문 역시 SOC예산이 26조원으로 책정되면서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건설 발주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문 경기 부진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침체된 경기 돌파구로 건설산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건설산업의 강한 책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 물량 구조상 공공투자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건설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기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 건설경기는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기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급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비주거시장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0호에서는 “2021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특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시장전망(건설·주택·오피스시장 전망) 및 건설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논단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집합건물 관련 입법 동향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동향, 연구원의 발간물 정보, 소식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설정책저널이 수록하고 있는 건설·주택 분야의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가 정부·산업·국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설정책저널 제40호(2021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에 도움을 주신 많은 전문가분께 감사를 드립니다.